

통일한국의 군통합 방안

손 기 응*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통일한국군의 내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조치 |
| II. 통일한국군의 형성 | V. 결 론 |
| III. 통일한국군의 내적 통합을 위한
교육 | |

I. 서 론

오늘날 군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의 다른 부분들인 정치, 경제, 학문, 기술, 문화 등의 제 분야와 서로 복합적이고도 종합적인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어떠한 학자도 과거 스펜서(Spencer)와 같이 “군사적 사회”와 “산업적 사회”간의 비양립성(Incompatibility)¹⁾을 더이상 가정하지 않으며, 명시적·묵시적으로 군과 기타 사회영역간의 공생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 Herbert Spencer, “Der militante und der industrielle Gesellschaftstyp,” in Volker R. Berghahn (ed.), *Militarismus* (Köln, 1975), pp. 40~60 참조.

군과 기타 사회부분과의 상호의존관계는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군과 기타 사회부분간의 조직 및 재정운영에 관한 정책조율의 필요성, 군과 기타 사회부분의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관료화의 경향 등에 의해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더하여 군내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직 및 운영의 탄력성, 가치관의 경직성 탈피, 직업화의 경향 등을 통한 “민간화(Verzivilisierung)”의 경향과 다른 한편으로 기타 사회부분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군의 조직체계 및 가치관의 수용 등을 통한 “군사화(Vermilitarisierung)”의 경향이 상호 복합작용한 결과이다.²⁾

이것은 곧 사회내에서 민과 군간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하고, 민간영역에 대한 군의 영향력을 바람직하지 않게 파악했던 고전적 자유주의 연구자들의 노력이 더이상 타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³⁾ 또한 군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전 사회체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역할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군이 사회가 합의로 지향하는 사회상의 정립에 기여함은 물론, 정립된 사회상의 실천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군의 역할은 새로운 민족공동체,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할 통일한국의 사회에서 더욱 요청되어질 것이다. 통일한국의 사회에서 모든 사회구성원, 사회부분이 함께 해결을 모색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는 남북한 주민간에, 제도간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극복하려는 통합의 과정일 것이다. 남북한 주민간, 그리고 제도간의 통합을 위해 모든 사회부분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군의 노력과 기여도 당위적으로 요청되어지는 국민의 합의사항이며 요구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통일한국의 사회에서 군이 사회통합에의 기여 요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한국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질성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 작업에 통일

2) Wilfred v. Bredow, *Moderner Militarismus. Analyse und Kritik* (Stuttgart, 1983), pp. 61~62, 112 참조. 한편 최근 민간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生存게임(Survival Game)”은 군사화의 부정적인 측면일 것이다.

3) 손기웅, “군국주의론: 분석의 Typology,”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1호(1994), pp. 425~449; 손기웅 외, “민군관계의 역사적 유형과 민군관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전략논총』, 제2집(1994), pp. 193~301 참조.

한국의 군은 내·외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첫째, 내부적 측면으로 남북한 출신 장병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제도적 조치를 통해 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거나, 갈등의 발생을 미연에 억제하여 그들간의 이질감 극복을 원활하게 한다. 둘째, 외부적 측면으로 통일한국군이 대국민, 남북한주민에 대하여 바람직한 군의 역할을 과시함으로써 통일후 사회의 통합과정에 기여한다.

이 글에서는 그중에서 군이 사회통합의 일환으로 남북한출신 장병들로 구성될 통일한국군의 내적 통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통일한국군이 내적 통합을 위해 어떠한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제도적으로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통일한국군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전망해 보고, 이어서 통일한국군의 내적 통합을 위한 교육과 제도적 방안에 관해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 통일한국군의 형성을 위한 남북한군의 “군통합”이라 함은 복수국가 군대의 제반 기능 및 조직체계를 하나의 기능 및 조직체계로 개편함과 동시에 그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하나로 융화시켜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군의 활동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결합과정 뿐만 아니라, 군내의 인력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극복하여 가는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다.⁴⁾

II. 통일한국군의 형성

통일한국군의 형성에는 첫째 통일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 둘째 통일당시 안보적 여건을 포함한 국내외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4) 손기웅, “독일의 통일과 군사통합,” 『한국군사』, 제2호(1995), p. 40.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에서 상정하는 통일한국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구도에 의해 통일된 남북한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상정하는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토대위에 시장경제가 기능하는 사회이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세계사의 큰 흐름일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이며, 모든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가 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물론, 통일국가의 미래상에서도 일관되게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며 통일의 준거틀임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전제하고 있다. 또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상정하는 통일 한국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족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장경제체제이다.⁵⁾

한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전제하는 통일에의 접근시각은 점진적, 단계적인 통일과정을 거치는 평화적 통일이다. 급진적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심화시키는 점진적, 단계적 통일과정을 거침으로써 남북한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가능한 한 사전에 줄여 통일을 달성하였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좀 더 원만히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는 통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후 남북한 주민간에는 사회문화적, 정신적 이질성이 상당기간 존재할 것이다. 분단기간중 극단화된 남북한 주민의 국가관, 생활방식, 신념 및 가치관 등의 차이가 점진적 절차를 거치는 통일과정에서도 완전히 극복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통일 이전부터 교류와 접촉을 통해, 그리고 통일 이후 독일정부의 동독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지역 주민간에 정신적, 문화적 이질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통일한국군의 형성에는 통일 한국의 안보정책, 주변 4국의 통일 한국의 군사·안보적 위상과 역할에 관한 입장, 지역내 재래식무기감축협정의 전방, 통일비용을 고려한 국내적 가용재원에 대한 고려, 국방비절약에 관한 국내 여론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안보적 여건이 크게 영향

5)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관하여는 민족통일연구원 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 체계와 실천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을 미칠 것이다. 남북한 대치상황이 종결됨에 따라 안보 위협은 한반도 내부가 아니라 주변4국, 특히 국경을 인접한 국가들과의 관계악화에서, 또는 동북아 전반적인 세력균형의 변화에서부터 비롯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군은 주변4국간의 세력균형을 적절히 이용하는 가운데 적정한 자주국방력을 다지는 선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한국의 군은 기본적으로 양적인 면에서 통일당시 남북한을 합한 군의 규모보다는 감축될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남북한간의 적대적 대치상황이 종결되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큰 이유는 통일과정에서 통일한국의 군사력 감축이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동의의 공통적인 전제조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의 달성은 기본적으로 민족내부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주변4국은 한반도통일에 대하여 엄연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독일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주변4국이 분단을 관리할 권리나 분단의 극복에 관여할 권리가 국제법적으로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분단의 극복은 “법률상(de jure)” 남북한간의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변4국이 분단의 극복에 관해 가질 수 있는 “사실상(de facto)”의 영향력은 간과되어질 수 없다. 특히 통일한국의 군사·안보적 위상과 역할에 관한 주변4국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는 통일자체는 물론 남북한 군통합을 조건지우는 외부적 틀이 될 수 있다.

주변4국에게는 통일한국의 통합군사력이 지역내 안보적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그들이 한반도통일을 동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통일한국군 자체의 군사력 뿐만 아니라, 동북아 세력균형의 재편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통일한국군의 대외안보협력체제도 함께 고려되어질 것이다.⁶⁾ 한국은 한반도 통일과 통일한국의 군사·안보

6)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통일독일의 군사력과 동맹정책에 대한 전승 4개국의 입장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통일독일의 동맹정책에 관하여 미국의 입장은 첫째, 통일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잔류해야 하며 둘째, 통일전 독일의 국경선이 통일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련도 통일전 국경선의 항구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일한 입장이었으나, 통일독일의 NATO가입에는 반대하였다. 통일독일의 NATO가입은 바르샤바조약기구(WTO)와의 세력균형을 무너뜨려 유럽에 새로운 불

적 위상에 관하여 통일과정에서 주변4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되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통일에 관하여는 국경을 마주하는 중국과 러시아, 안보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등 3국과 협의를 진행한다.

둘째, 통일한국의 군사·안보적 위상과 역할에 관하여는 일본을 포함한 4국과 협의를 진행한다.

셋째, 통일과 통일한국의 군사·안보적 위상과 역할에 관한 협의에 그외 국가의 참여를 배제한다.

넷째, 통일한국군의 형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지역군비축소를 추진하되, 이 경우에는 동북아 및 아태지역 국가들이 포함되는 확대협의를 진행을 고려한다.⁷⁾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주변4국의 요구에 의한 통일한국의 군사력규모 축소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다. 통일에 대한 묵인과 병력규모의 축소에 대한 그들간의 동의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한반도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합의의 기반위에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주변4국과의 관계 속에서 세력균형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축소된 군사력으로도 국가안보를 확

안을 초래함으로 통일된 독일은 어느 군사동맹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독은 이에 대하여 통일독일은 NATO회원국으로 남을 것이나 동부유럽으로 NATO영역의 확대는 없을 것이란 미국의 입장과 소련의 입장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양면전략, 이른바 “sowohl als auch” 전략으로 대응하였다. 손기웅, “독일의 통일 및 군사안보적 위상에 대한 전승 4개국의 입장과 서독의 대응,”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1996), pp. 289~316 참조. 한편 독일의 군사통합에 관하여는 손기웅, “독일의 통일과 군사통합,”(1995) pp. 39~59; Ulrich Albrecht, *Die Abwicklung der DDR: Die “2+4-Verhandlungen”. Ein Insider-Bericht* (Opladen, 1992); Michael Wolffsohn, “Der au enpolitischen Weg zur deutschen Einheit,” Eckhard Jesse/Armin Mitter (eds.), *Die Gestaltung der deutschen Einheit. Geschichte-Politik-Gesellschaft*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onn, 1992), pp. 142~162 참조. 최근 NATO와 러시아간에 합의된 동부유럽으로 NATO 영역의 확대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유럽대륙내 세력균형정책이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7) 손기웅 외, “통일한국의 군통합과 북한 군수산업 활용방안,” 『안보학술논총』, 제7집 2호(1996), pp. 487~494 참조.

보하는 동시에, 병력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소위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을 통일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⁸⁾

양적인 면에서의 군사력 감축은 국내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할 것이다.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통일비용의 충당문제는 통일한국의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통일에 대한 주변4국간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 바탕위에 축소된 병력으로서도 국가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통일한국의 군은 병력위주의 부대구조에서 질위주의 자원절약적, 기술집약형 부대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정예군의 건설은 내외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과 동시에 통일한국의 정치작업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정예군은 침략을 받았을 때 적에게 인내하기 어려운 댓가를 줄 것이라는 평가를 주변국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침략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약소국이면서도 강력한 민방위조직에 기초한 자주국방력을 바탕으로 중립을 표방하며 주권을 지켜 온 스위스의 경우가 통일한국에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통일한국군의 군사력 감축이 주변4국의 공통적 요구라 상정한다면 한국은 통일과정에서 군사력의 감축정도를 먼저 국내적으로 결정하고, 통일과 통일한국의 군사·안보적 위상과 역할 정립에 관한 주변4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외교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주변4국과의 협의에서 통일한국군의 병력규모를 국내적으로 결정된 예상규모보다 좀더 많이 제시하여 협상과정을 유리하게 이끈다.

둘째, 통일한국의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상병력 규모의 상한선을 상기과정을 통해 확보하되 통일 이후 실제 유지 병력규모는 안보·경제

8) 국방비규모에서 볼 때 통일한국의 국방비가 통일이전 남한의 국방비보다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양적 측면에서의 병력감축으로 인해 인력유지비는 절감될 수 있으나, 길어진 국경선과 해안선을 포함한 안보영역의 확대, 국군의 기술수준에 준하는 국방체계의 북한지역으로의 확산 등으로 인해 국방비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통일한국의 국방비산출에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적 여건에 합당하게 설정한다.

셋째, 주변4국이 통일한국에 병력감축을 강제한다는 국제적 시각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므로 군사력 감축에 대해 한국의 자발적 결정형식을 취하되 이를 역내 재래식무기감축을 위한 주변4국과의 외교협상과 병행하여 추진한다.

넷째, 군사력 감축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잉여 군장비·시설의 해외이전 및 수출에 관하여 미국을 포함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한다.⁹⁾

다섯째, 군사력 감축을 전제하는 대신 통일한국이 제한 없는 주권을 누리며, 양자적 혹은 다자적 안보협력체제를 자유로이 형성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러면 통일한국의 군은 어떠한 형태의 군통합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규모, 특히 병력의 수는 어떠한 수준이 될 것인가? 통일한국의 군을 형성하기 위한 군통합의 방안으로는 첫째, 남북한 두 개의 군체제를 잠정적으로 유지한 채 양군이 통일한국군으로서 공동의 인식을 넓혀가면서 점진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법 둘째, 새로운 군을 창설하는 방법 셋째, 한쪽의 군체제로 통합하는 방법 등 세가지가 상정될 수 있다. 통일한국의 안보적, 사회적 제반 상황을 고려하고 독일, 베트남, 예멘과 같은 군통합의 역사적 사례를 참조하여 추진되어야 할 통일한국군의 건설을 위한 군통합 형태는 그중에서 새로운 군 창설의 형식을 취하는 기본틀 속에서 국군의 조직체제와 무기체제를 중심으로 인민군을 통합하고, 인민군의 불필요한 조직, 인원, 무기체제를 과감하게 감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법적 통일과 동시에 북한군을 해체하되, 북한군의 자원자중 일부를 통일한국군에 편입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군 전체를 통일한국이 요청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의 유지

9) 동서독군 통합과정에서 잉여 군장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Otfried Nassauer, "An Army Surplus-The NPA's Heritage," Edward J. Laurance/Herbert Wulf (eds.), *Coping with Surplus Weapons: A Priority for Conversion Research and Policy* (Bonn: Bonn International Center for Conversion, 1995); Deutscher Bundestag, *Verteidigungsausschuß* (1991. 12. 19); Deutscher Bundestag, *Document 12/2026, Attachment 1* 참조.

와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예군으로 개편하는 “제2의 창군”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군통합 방안이 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기반하에 시장경제가 기능하는 사회구성체여야 할 것이며, 통일한국군은 이러한 사회를 보위하는데 고유의 임무가 있다. 통일 직후 단기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의 양상 속에서도 통일한국군은 상기의 임무를 일사불란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통일과정상에서 단기간내에 군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안보력의 약화가 초래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서 조직되고 교육된 국군이 통일한국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둘째, 병력 및 장비의 감축이 내외적 여건에 따라 추진될 상황 속에서 국군의 조직 및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통일한국군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국군중심의 통일한국군 건설은 통일직후의 과도기에 한정된 것이다. 이후 남북한지역출신 장병들이 형평성 있게 통일한국군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남북군사력의 감축을 전제하고 이러한 군통합방식을 취할 때 인민군은 대폭 감축되어야 한다. 통일독일의 연방군(Bundeswehr)건설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독일의 군통합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동독인민군(Volksarmee)의 해체와 동시에 서독연방군으로의 부분적 편입이었다. 이에 따라 동독인민군은 해체되어 연방군의 동부사령부로 개편되었고, 대령급 이상의 전장교와 모든 계급의 정치군인이 강제 예편되었으며, 연방군에 편입되는 장교도 1~2계급씩 강등되었다. 그리고 사병의 경우에는 근무 연한이 3~4년 이상인 경우 유예기간을 거쳐 대부분 전역조치 되었다.¹⁰⁾

10) 동독인민군의 연방군에의 편입에는 동서독이 1990년 8월 31일 체결하고 9월 23일 발효시킨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독일통일의 회복에 관한 조약』의 「부록 I 조약 제8조와 제11조에 따른 연방법 적용에 관한 특별 경과 규정」 제XIX 장 「공무관계 인사법과 군인법 업무영역 B: 군인법」 제ii 절 「동독인민군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기준이 되었다. 민족통일연구원 편, 『독일 통일조약 비준법률』 (서울:

통일한국군의 구성시에는 북한인민군 자원자의 편입조건과 전역조건이 명확히 전제되어야 한다. 인민군 개편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대령급 이상의 인민군 장교, 50세 이상의 장교, 정치장교 등은 즉각 전역시킨다.

둘째, 그의 전역희망자는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 후 전역조치한다.

셋째, 통일한국군으로의 편입을 희망하는 인민군 장교는 경력에 대한 조회와 일정한 보수교육을 거쳐 한시적으로 채용하며, 근무의 연장은 재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넷째, 통일한국군으로의 편입을 희망하는 인민군 사병의 경우에는 단기간 근무한자-예를 들어 3년미만-를 중심으로 경력에 대한 조회와 일정한 보수교육을 거쳐 한시적으로 채용한다. 이들중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자는 재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그러면 통일한국군은 어느 정도의 병력으로 구성될 것인가? 통일당시의 국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통일한국군의 병력 상한선을 총인구의 약 1% 700,000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한국군의 병력규모 결정에는 통일과정에서 주변4국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1994년도 기준 주변4국의 인구대비 정규병력의 규모는 미국 0.56%(인구: 265,622,400/병력: 1,483,800), 러시아 0.85%(인구: 149,120,800/병력: 1,270,000), 중국 0.24%(인구: 1,210,476,000/병력: 2,935,000), 일본 0.19%(인구: 125,538,000/병력: 235,500)이다.¹¹⁾ 이중 낮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자위대 성격의 일본의 경우를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476~482 참조. 그의 동서독군 통합과정과 그 주요일지에 관하여는 한민구, 『통일독일의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 연방군 동부사령부의 통합작업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주독대사관, 『통독후 독일의 군사현황 200-74』(주독대사관무관부, 1992. 9); 주독대사관, 『통독후 연방군 구조개편 방향 200-75』(주독대사관무관부, 1992. 9) 참조.

11)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6~97*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1993) 참조.

제외하면 통일한국군의 병력규모는 미국의 0.56%와 러시아의 0.85% 사이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할 경우 1994년도 기준으로 남북한 합계 1,714,000명의 정규병력(남한 660,000명과 북한 1,054,000명)은 대폭 삭감되어야 할 것이다. 1994년도 남북한의 총인구가 69,508,000명(남한 45,204,000명, 북한 24,304,000명)이므로 만약 통일한국군의 병력규모가 미국과 러시아의 인구대비 병력비율의 중간치인 0.7%(48,6556명)에서 결정되어질 경우 약 1,227,444명이 감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폭적인 병력감축은 통일 이후 예견되는 대규모 실업과 사회·경제적 혼란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통일한국군 병력규모의 상한선으로 인구대비 1%를 제시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주변4국과의 논의에서 그 이상을 제시하여 1%로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통일 즉시 인구대비 1%로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할 수도 있다. 나아가 1%로 감축이 완결된 시점에서 주변4국의 인구대비 병력수를 고려하여 통일한국군의 병력규모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적 합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주변 4국과 합의된 병력규모는 상한선이며 실제 통일한국이 유지하는 통일한국군의 규모는 당시의 안보·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탄력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통일한국군 형성의 기본원칙은 국군의 기본조직과 인력을 중심으로 인민군을 통합하여 새로운 군을 창설하는 것이다. 199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총인구의 1%는 약 695,000명으로 이 경우 국군의 병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약 35,000명의 인민군을 통일한국군으로 통합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당시에 이르기까지의 인구증가를 고려할 때 약 700,000의 병력이 총 인구 1%내외로서 적절한 통일한국군의 병력수로 제시될 것이다. 물론 통일 당시 남북한 총인구의 1%가 700,000을 초과할 수 있으나, 주변4국의 병력규모가 모두 인구대비 1%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700,000을 협상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한국군의 병력수가 700,000명으로 설정될 경우 통일한국군에 통합될 인민군의 수는 약 40,000명이 될 것이다. 물론 통일과정에서 국군의 병력수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경우, 통일한국군에 통합될 인민군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셋째, 통일한국군의 형성에 기존 국군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함으로써 병력감축에 따른 국군내 동요를 방지할 수 있으며, 군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넷째, 약 40,000명, 혹은 국군이 재편될 경우 그 이상의 인민군을 통일한국군에 참여시켜 지역사정에 밝고 인민군 무기체계에 정통한 이들을 통해 북한지역에 산재한 방대한 양의 무기, 탄약, 시설 등에 대하여 그 처리 방식이 결정되기전까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통일한국군에 통합될 인민군을 제외한 병력과 그에 속한 장비를 감축함으로써 군사력 감축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인력비용을 절감하여 통일비용에 전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국군병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인민군의 대폭 감축을 전제하는 이와 같은 군통합은 통일과정상의 단기간에 국한된다. 통일한국의 안보가 확보되고 난후 통일한국의 국방은 병역의무제(제Ⅳ장 참조)에 입각하여 남북한출신 젊은이 모두에 의해 형평성있게 충원되는 통일한국군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군중심의, 인민군의 대폭적인 해체를 통한 이와 같은 통합작업은 인민군의 입장에서 볼 때 수모적이라 할 수 있으며, 커다란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다. 그것은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군외부적으로는 감축되고 전역된 인민군의 사회복귀 및 적응문제, 실업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인민군의 대폭적인 급격한 해체는 사회통합상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므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역 인민군들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전역금 및 연금,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 기타 사회보장적 대책마련을 통해 그 후유증을 줄여야 한다.

군내부적으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통일과정이 전제하는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단계의 과정에서 군사분야의 신뢰구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편입된 인민군출신자 및 북한지역 출신자로서 입대한자와 국군간의 적응문제가 갈등요인이 될 것이다. 군의 통합에 대한 의구심, 저항, 불만 등이 남북한출신 장병 양쪽에서 일어날 수 있다. 국군내에서는 인민군장교를 모두 해고하여야 한다는 의견, 화합의 차원에서 전원 사면하여야 한다는 의견, 인민군이 국군의 명예를 실추한다는 불평 등이 나올 수 있다. 인민군내에서는 적에게의 통합에 대한 저항감, 이질적인 분위기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한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 가장 적대적이었던 집단,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교육되고 훈련되었던 인원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것임은 자명하다. 여기에 더하여 인민군출신자에 대한 계급, 임금 및 연금산정문제, 기타 사회복지적 대우문제 등도 갈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Ⅲ. 통일한국군의 내적 통합을 위한 교육

통일한국군의 형성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양상을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한 군내적 통합의 노력에 군은 그러면 어떠한 측면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군내에서의 남북한출신 장병들간의 통합은 기타 사회부분에서 보다 더욱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우선 기회의 평등성이다. 계급별, 직책별로 각자에게 맡겨진 권한과 임무에 따라 공동으로 근무하고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며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남북한출신 장병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주변적 조건도 통합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 전차에 동승한 전차병에 북한출신, 남한출신이 있을 수 없으며, 단체생활을 통해 상호의존감과 공동운명체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서로간에 이해심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북한출신 장병들은 오랫동안 집단주의, 조직사회, 계획사회의 사회구조 아래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개방적인

기타 사회부분보다 군에의 적응이 좀더 용이할 것으로 여겨진다. 독일 통일 6주년을 바라보는 현재 군내부에서의 동서독통합이 타분야보다 모범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문제는 군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정신자세이다. 남북한출신 장병들이 서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정신적, 이념적 성향에 따라 군복무와 생활에 임하는 태도와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북한출신 장병들의 정신자세에는 남한출신 동료의 태도와 행위가 일정부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북한출신 장병들이 새로운 통일한국 사회내에서, 그리고 새로운 통일한국군내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남한출신 장병들과의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될 수 있는 것이 교육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연방군에 편입된 동독인민군출신 장병들은 물론 동독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이 순조로운 국민형성의 기초작업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통일연방군내에서 동독인민군 간부출신에 대한 교육이 적극 추진되었다. 교육 가운데 국민을 위압하던 인민군을 “제복입은 국가시민”(Staatsbürger in Uniform)으로 체질을 바꾸려는 정치교육에 가장 힘을 쏟았다. 장병들을 성숙한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주적 국가의 가치와 더불어 국가기구 및 기능, 군의 국가보위 임무, 국가 및 사회에서의 군의 역할, NATO와 연방군과의 관계 등이 교육되었다.¹²⁾ 장병들에 대한 정훈교육(Innere Führung)에는 다음과 같은 10원칙이 강조되었다.

첫째, 군인은 제복을 입은 국가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자각적으로 행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결부된 의무도 자각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둘째, 군인은 군사적 지휘보다 정치적 지휘가 우선함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군인은 국가와 군인 상호간의 충성관계를 인식하여야 한다.

넷째, 군인에게서 평화시의 근무가 전쟁의 상황속에서도 지속되어야 함

12) W. Mickel/D. Zitzlaff (eds.), *Handbuch zur politischen Bildung* (Bonn, 1988), pp. 497~498 참조.

이 내면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상관은 책임감을 인식하고 술선수범하려는 내면적 태세를 깨우치고, 유지하며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여섯째, 상관은 지휘교리의 원칙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일곱째, 상관은 모든 결정에 앞서 하급자의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덟째, 상관은 하급자의 임무에 부합하게 훈련, 교육, 교양하고 그들의 인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홉째, 군인은 진정한 군인의 미덕과 경험을 받아들이고 실천하여야 한다.

열째, 상관은 정치적, 사회적, 학문적, 기술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여야 하며 그 변화를 지휘시에 반영하여야 한다.¹³⁾

이러한 내용으로 교육은 1990년 10월 3일의 법적 통일 이전의 경우 서독의 국방장관이 1990년 9월 10일 발표한 인민군장교 교육실시계획에 따라 1,000여명의 동독장교를 대상으로 3주간 실시되었다. 통일 이후에는 사단 및 연대급 부대단위에 정규과정을 설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치 교육 및 각종 군사훈련이 포함된 교육의 대상 및 교육중점은 <표>와 같다.¹⁴⁾

그러면 통일한국군에 있어서 교육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실시되어야 할 것인가? 교육은 국군에 의해 구성되는 교육단이 실시하며 이질성 극복을 위해 남북한출신 장병 양쪽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통일한국군에 통합될 인민군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군에 충원될 모든 북한출신 장병들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의 내용은 북한출신 장병들이 과거의 부담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교육의 초점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원리, 다원주의 가치관,

13) Bundeswehr, *Informationsmappe zur Inneren Führung in der Bundeswehr* (Bonn, 1990) 참조. 한편 통일 이후 독일 및 베트남에서 사회통합을 위하여 행하여진 동화교육에 관하여는 손기웅 외,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동화교육: 독일 및 베트남 사례분석을 토대로,”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자료 19(1996), pp. 81~119 참조.

14) 주독대사관, 『통독후 독일의 군사현황 200-74』 (주독대사관무관부, 1992. 9), p. 14.

〈표〉 독일연방군편입 인민군간부 대상 교육내역

구 분	대 상	교육중점	기간	교육장소	비 고
1차 예비 교육	중대장	군법·교범·기타 예규에 입각한 부 대관리	2주	연방군	
	중대 선임하사 위병근무 간부	교육훈련 계획 실시 지휘통솔		장교학교 실무부대(서독 군)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정훈교육	2주	정전교 참모대	
기타 보수 교육	장기복무자 (복무예정자)	개인자습			
		부대실습	4주	서독군 실무부 대	
		정훈교육	2주	지참대	예비교육 미 실시자
		보수교육	12주		2년 이상
		근무지 안내교육		각부대	근무예정자

시장경제체제 원리 등 통일한국사회에 적합한 이념과 가치관에 대한 교육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은 전역대상 인민군, 전역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복무하는 인민군, 보수교육 및 경력조사를 거쳐 통일한국군에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될 인민군, 새로 입대하는 북한출신 장병 등으로 구분하여 지휘관, 하사관, 사병 등의 대상에 따라 차등적으로 실시한다. 그러나 교육량과 교육강도를 제외한 기본적인 교육의 내용은 동일하다. 구체적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은 북한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철학적, 역사적, 실천적 한계와 오류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내용과 그 가치의 보편성,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장점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그 과정에서 북한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적개심과 책임

전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일방적인 강조 보다는 사회주의적 장점을 적극 수용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자본주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북한출신 장병들의 머리속에 남아 있는 조선노동당의 절대성과 그 강령의 독점적 진리성 주장의 잔재를 타파하고 제거하며, 그들이 자유스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교육방향을 설정한다. 민주사회에서는 갈등이 없을 수 없고, 절대적인 진리주장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과 서로간 이해의 상충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군내에서 남북한출신 장병들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견해를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항상 위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던 행위양식에 익숙한 북한출신 장병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것이 자신에게나 집단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한다.

넷째, 북한출신 장병들이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으로 인해 군내에서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군외부에서 사회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훈화하며, 극우주의적인 행태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한다.

다섯째, 통일에 관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 통일이 유구한 단일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공유한 우리민족 모두에게, 후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할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교육한다. 통일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수립되고 법치국가와 자유로운 인간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며 경제 번영을 가져와 사회안정과 발전이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여섯째, 통일과 더불어 보다 나은 삶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북한출신 장병들이나 주민이 통일이 가져다 줄 사회 제 차원에서의 보다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더구나 그들의 인내와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라는 현실을 인식시킨다. 또한 분단에 의한 고통이 통일에 따르는 어려움에 비할 수 없을 정도의 비극이며, 민족적 재난임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통일한국군의 건설과 통일한국의 건설에 기여

동참하도록 한다.

일곱째, 한국전쟁의 원인과 공과에 대한 교육은 통일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장병들에게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교육과제이다. 한국의 분단과 정과 전쟁당시의 국내외적 주변정세, 전쟁발발의 책임소재, 전쟁이 민족에 가져다 준 비극적 고통, 그 속에서 국군의 임무수행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를 통해 북한출신 장병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한다. 그리고 당시 인민군의 대부분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자로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 북한정권에 의한 희생자,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체감하도록 하고 그것이 민족의 비극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그들이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통일한국군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그 임무를 숭고하게 받아들이 충정으로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교육한다.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시에는 <표 1>에서 제시된 독일의 사례를 참조한다.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이외에 각종 시청각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과 같은 교육은 북한출신 장병들내에 잠재된 인식상의 거리감을 극복하여 남한출신 장병들과의 정신적, 심리적 일체감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교육에는 상당한 조심성이 요구된다. 자칫 이러한 교육이 북한출신 장병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정신적 세뇌와 독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방법상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교육을 기획하고 교수하는 남한출신 인사들이 우월의식을 가지거나 북한출신 장병들에 대한 차별적인 편견을 갖지 않으며, 그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심리적 고통의 극복과정에 동참한다는, 그들을 이해하려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이 점은 통일한국군을 구성하는 남한출신의 전 장병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이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한출신 장병들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독일연방군이 중점을 두고 있는, 앞서 언급한 정훈교육과 같은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군운영은 남북한출신 장병들간의 거리감을 좁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인민군전역자에게는 직업교육을 포함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전역이 국제적 협의를 거친 병력감축에 따른 것인 만큼, 이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주변국 혹은 국제적 재정기구 - 예를 들어 아시아 개발은행(ADB), 공적개발원조(ODA) 등 - 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IV. 통일한국군의 내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조치

북한출신 장병들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외에 통일한국군이 군내부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북한출신 장병들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다. 그들에 대한 급료, 의료혜택, 전역금,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차등 적용은 그들이 남한출신 장병들에 대하여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게 하여 군내의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체제하에서 장기간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근무한 경험과 자격을 상당부분 혹은 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그들의 박탈감은 깊어질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독직후 독일연방군으로 편입된 인민군장병들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들은 서독출신 장병급료의 70%를 지급받았으며, 전역후 장교 및 하사관 중 서독출신은 급료의 75%를 연금으로 받는데 반하여, 급료의 35%만을 연금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과거 동독군에는 영외 출·퇴근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이후 전적으로 동독지역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 인민군출신 장교들의 영외 숙박시설은 매우 부족했고 문화적인 혜택도 서독지역에 비해 크게 열악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이 인민군출신 장병들을 상대적인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젖게 하여 군내·외에서의 갈등을 야기한 원인이 되었다.¹⁵⁾

15) 독일연방의회의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인 Biehle(기사당)가 1991년 1월중 271명의 동독지역출신 장병들로부터 접수한 소원서에서 나타난 첫째가는 이의사항이 금전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이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 “한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같은 군인인데 왜 서독지역출신 군인과 차별대우를 하는가?”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다. *Die Welt*, 1991. 3. 5.

이에 대해 독일정부는 동서독출신 장병들간의 내적 통합을 위해 동독출신 장병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노력하였다. 동독출신 장병들에 대한 법적 지위보장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1990년 11월부터 일반병의 급료를 동서독출신 장병들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1991년 7월 1일부터 전역금 및 크리스마스상여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였다. 또한 연방고용청(Bundesarbeitsamt)과의 업무협조로 전역군인들에게 민간인 직능을 부여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였다. 구동독지역인 드레스덴 소재 사관학교에서는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동독지역으로의 파견을 꺼리는 서독연방군 장병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동서독지역으로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통일의 정치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남북한출신 장병들에 대한 혜택과 복지의 수준이 동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출신 장병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들을 대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대우가 이루어질 전반적인 계획을 그들에게 제시하여 그들의 동의와 인내심을 유도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출신 장병들에 대한 동등한 법적 지위보장과 물질 보상이 정신적, 심리적 갈등의 해소노력 못지 않게 군내 통합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다.

교육과 제도적인 복지대책 이외에 통일한국군이 군내의 통합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파급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병역의무제의 유지이다. 병역의무제는 통일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병역평등화의 지주이다. 군은 사회에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 개인적인 손실도 감수하는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배양할 수 있는 사회교육의 場이다. 병역의무제로 징병된 장병들이 군내에서의 통합체험을 바탕으로 전역후 기타 사회부분에서의 통합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사회와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주변의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병역의무제의 유지는 모든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줌으로써 안보태세의 이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후 병력감축을 전제하고 병역의무제를 계속 실시할 경우 병역복무

대상자와 현역입영자간의 수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즉 소수의 징병으로 인해 병역평등성의 근거가 상실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역입영자외의 대상자들이 사회분야, 자연재해 대책분야, 환경보호 및 기타 지원분야 등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함은 물론, 청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겪을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타 군정책에 의한 사회통합에의 기여는 경제적 측면이다. 병력축소로 인해 정리될 잉여 군주둔지, 시설, 부동산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군의 현대화, 북한출신 장병들에 대한 주택문제해소, 기타 소요되는 통일비용에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또한 북한 각 지역에 신설될 병무청을 통해 상당부분의 실업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지역병무청의 임무중 상당부분을 지역사정에 밝은 북한출신 장병들이 맡게함으로써 직무의 원활한 운영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근무자들을 사회통합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한출신 장병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과 제도적 조치를 통해 통일한국군은 “하나의 군대”로 육성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군내부의 통합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며, 통합의 영향은 군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전반적인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파급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V. 결 론

통일한국군의 형성과 군의 내적 통합을 위한 교육과 제도적 조치에 관한 이상의 논의는 점진적, 단계적 통일과정을 거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준거한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과 방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그것에 대비한 준비도

16) 통일전 서독의 경우 국토의 1.5%, 동독의 경우 국토의 4.3%가 군용으로 사용되었다. 독일은 통일후 잉여 군사부지를 주택지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경제분을 실업 및 주택난 해결에 투자하였다.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전제로 한 앞서의 논의가 급격한 통일시에 취해져야 할 정책과 그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급격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전제로 구상된 앞서의 논의가 압축적으로 이행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통일이후 군의 내적 통합을 위한 이상과 같은 노력을 통해 통일한국군은 사회통합과정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군은 사회내 어느 집단보다도 조직화되어 있어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는데 가장 큰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적대적 집단이었던 남북한군이 군의 내적 측면에서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집약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정에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모든 분야에 통합의 분위기를 과급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병역의무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 학교”로서 군이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러한 노력을 전개할 때 통일한국의 사회에서 군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 요구되는 국가안보를 충실히 수행하는, 사회 제 부분과 서로 상호의존하는 공생공영의 집단으로 인식될 것이며,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그 존재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다.

통일 이후 군의 내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단기간내에 큰 결실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내에 존재하는 갈등과 이질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다. 갈등은 조정될 수 있어도 소멸될 수는 없으며, 조화와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통일한국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갈등이 구조화되지 않도록 슬기로운 해결방법을 찾는 데 통일한국군이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통일한국군이 넘어야 할 하나의 도전이 될 것이며, 동시에 통일한국군의 토대를 굳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일한국군은 그러한 노력을 민족이 새롭게 도약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군이 받아들여야 할 사명으로 기꺼이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